

OECD 「한국의 포용적지속가능한 웰빙: OECD 가입 30년과 미래 정책 기회」 주요 내용 및 시사점

- Inclusive and Sustainable Well-being in Korea: 30 Years of OECD Membership and Future Policy Opportunities -

2026년 8월 13일

OECD 「한국의 포용적·지속가능한 웰빙: OECD 가입 30년과 미래 정책 기회」

주요 내용 및 시사점

- Inclusive and Sustainable Well-being in Korea: 30 Years of OECD Membership and Future Policy Opportunities -

2026. 8. 13.(목) 통일외교사회정책실 장 경 수

- OECD 가입 30년간 한국은 소득자산 등 경제적 웰빙에서 OECD 최상위권 성과를 거뒀으나 노인빈곤, 자살률, 정부신뢰, 성별격차 등 삶의 질 지표는 OECD 하위권에 머물러 ‘성장과 웰빙의 괴리’가 뚜렷
 - 특히 청년-연금수급 공백에 따른 노인빈곤, 청년의 구직난·사회적 고립, 아동·청소년 자살률 급증, 정치효능감 급락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국제비교 근거로 활용 가능
 - 이에 노인빈곤 해소, 청년 자립 지원, 정신건강 시스템 개편 등 6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‘체감형 웰빙 국가’ 대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
- 정책적 시사점 및 추진 정책과제
 - ① 소득 중심 성장 패러다임의 구조적 한계 노출 → ‘소득 공백’ 구조 개혁을 통한 노인빈곤 해소
 - ② 세대 간 정책 공백의 이중구조 → 이행기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 자립 지원
 - ③ 정신건강 위기는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 문제 → 전 생애주기 정신건강 시스템 개편
 - ④ 정부신뢰·정치효능감의 급락은 정치적 기회이자 경고 → 정치 신뢰 회복을 통한 프레임 전환
 - ⑤ 저출산 문제의 근본원인으로서의 성별 격차 →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통한 저출산 대응
 - ⑥ 자연자본(에너지) 부문의 성과 부진 → 균형있는 에너지 정책으로 재정립

1. 연구 배경 및 목적

- 2026년은 한국의 OECD 가입(1996년) 30주년이 되는 해로, OECD는 이를 계기로 지난 3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이 국민의 실질적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웰빙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종합 평가한 국가별 심층보고서¹⁾를 발간
 - OECD는 2011년 「OECD 웰빙 프레임워크(Well-being Framework)」를 수립하여 국가 성과를 GDP 등 거시경제지표만이 아니라 다차원적 관점에서 측정해 왔으며, 본 보고서는 이 프레임워크를 한국에 적용한 국가별 특화 분석임
 - 한국 통계청이 2014년부터 발표해온 「국민 삶의 질 지표(KQoL)」와도 연계·보완되는 자료로 국제 비교와 국내 통계를 동시에 활용해 신뢰도가 높은 근거자료로 평가됨

1) OECD (2026), Inclusive and Sustainable Well-being in Korea: 30 Years of OECD Membership and Future Policy Opportunities, OECD Publishing, Paris, <https://doi.org/10.1787/a8940343-en>. (검색일: 2026.8.13)

[표 1] OECD 웰빙 프레임워크 구조

웰빙 프레임워크	측정 지표
① 현재의 웰빙 (Current well-being)	소득·자산, 고용의 질, 주거, 건강, 지식·역량, 환경의 질, 주관적 웰빙, 안전, 일-생활 균형, 사회적 연결, 시민참여 등 11개 영역으로 구성
② 미래를 위한 자원 (Resources for future well-being)	인적자본, 경제자본, 자연자본, 사회자본 등 4대 자본의 축적·고갈 상태로 지속가능성을 진단

※ 각 지표는 평균값뿐 아니라 집단 간 격차(성별·연령·소득), 상·하위 격차, 결핍률까지 함께 측정하여 평균의 함정을 보완하도록 설계

- 본 보고서의 목적은 OECD의 객관적·국제비교적 데이터를 토대로 ①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가 거둔 성과와 ②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취약 지점을 동시에 규명하고, 나아가 정책 어젠다 설정에 활용하는 데 있음
- 특히 본 보고서가 지목한 3대 핵심 정책과제(청년의 경제적 자립, 전 생애주기 정신건강·사회적 연결, 성별 격차의 구조적 요인)는 현 정부의 정책 성과를 국제기준으로 냉정하게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이자 대안을 설계하는 데 핵심 축

2. 주요 내용

① 물질적 웰빙: 뚜렷한 성장, 그러나 세대 간 불균형

- 가구소득 연평균 증가율(2004~2022년)은 2.6%로 OECD 평균(1.2%)의 두 배 이상
 - 이 기간 한국-OECD 평균 소득 격차가 절반으로 축소(2022년 가구소득 32,600달러)
- 가구순자산은 2013년 이후 OECD 평균을 지속 상회, 2023년 247,000달러 초과
 - 유동자산 부족으로 인한 재정취약계층 비율도 17%(2023)로 OECD 평균(42%)의 절반 이하
- 상대빈곤율 18.6%(2011)→15%(2023), 소득 5분위 배율(S80/S20) 8.3→5.8로 개선
 - 아동빈곤율은 2011년 OECD 평균 상회에서 2022년 OECD 최저 수준으로 극적으로 개선
- 반면 66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 40%(2022)로 OECD 평균(16%)의 2.5배, 76세 이상은 54%(OECD 평균 19%)에 달함
 - 법정 정년(60세)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(63세) 사이의 '소득 공백'이 구조적 원인
 - 65~69세 고용률 51%(OECD 평균 29%), 70~74세 40%(OECD 평균 17%)로 OECD 최고 수준이나 대부분 저임금·불안정 일자리로의 재취업
- 가계부채는 주택 매입·전세보증금 부담을 중심으로 2010년 이후 OECD 평균을 상회하며

지속 증가

- 특히 청년층(20~30대) 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·자산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지름

② 건강·안전·교육: 세계 최상위 성과와 이면의 위험 신호

- 기대수명 82.9세(2022)로 1996년 대비 8.5년 증가, OECD 평균보다 약 2년 높음
- 살인율은 30년간 OECD 최저 수준을 유지
 - 교통사고 사망률은 1996년 OECD 최고 수준에서 '안전속도 5030' 등 정책으로 80% 이상 감소, 현재 OECD 평균에 근접
- 25~34세 고등교육 이수율 70%로 OECD 1위(평균 48%), PISA 학업성취도 최상위권 지속
- 다만 이러한 성과 이면에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이 병존함.
 - (성인 인지역량): PIAAC(2022~23) 결과, 35세 이후 인지능력 저하 폭이 타 OECD 국가보다 뚜렷, 이는 평생학습·재교육 체계 미흡을 시사
 - (주관적 건강 인식): 건강 양호 응답은 52%(2022)로 OECD 평균 67%에 크게 못 미침
 - (비만율): 7.2%(2023, OECD 최저 수준)이나 1998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이며 팬데믹 이후 급등
 - (학생 웰빙): 학업 성취도는 최상위이나 학생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 이하, 성과 중심 교육의 구조적 부작용

③ 자연자본·사회자본: 경고 신호가 뚜렷한 두 영역

-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및 탄소발자국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
 - 재생에너지 비중은 0.4%(1996)→3%(2023)로 30년간 성장했음에도 OECD 평균(약 15%)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
 - 재활용률은 57%(2021, OECD 평균 42%)로 유일하게 긍정적 지표이나 자연 토지피복·생물다양성(Red List Index)은 OECD 평균을 지속 하회
- 정부·타인에 대한 신뢰 모두 OECD 평균보다 낮고 하락 추세
 - 특히 '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'는 정치효능감 응답은 2021년 55%(참여국 중 최고)에서 2023년 39%로 급락, 특히 30~49세 연령대에서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짐
 - 자원봉사 참여율 19%(2022~23)로 OECD 평균(23%) 하회
- 사회자본 전반의 약화는 향후 정책 신뢰도 및 사회통합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로 평가

④ 청년층: 이행기의 구조적 좌절

- 20~29세의 81%(2020)가 부모와 동거 중(OECD 평균 50%)
 - 고학력 청년의 경제활동 비활동률은 여성 21%, 남성 13%로 OECD 최고 수준
- 2024년 기준 19~34세 '극단적 사회적 고립' 청년 비율 5.2%로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, 이 중 32.8%가 구직난을 원인으로 지목
 - 청년 고립의 사회·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소 7조 원(약 120억 달러)으로 추산(한국청소년재단, 2023, 의료비·실업 관련 사회보장 지출·저출산 기여 등 포함)
- 국회의원 중 40세 미만 비율 5.7%로 OECD 최저(평균 22%)
 -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부재가 정책 소외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

⑤ 정신건강·사회적 연결: 전 생애주기 위기

- 자살률은 30년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지속
 - 특히 10~14세 자살률이 2000년 0.8명(인구 10만 명당)에서 2024년 3.5명으로 약 4배 급증, 이 중 10~14세 여아는 1.2명(2017)→4명(2024)으로 3배 이상 증가
 - 세계적 청소년 자살률 감소 추세와 정반대 양상
- 18~29세의 외로움 경험률은 13%(2022)→16%(2023)로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상승
 - 청년 정신건강 위기가 고립·자살 위험과 직결되는 구조
- 중·고생(13~18세)의 42%(2024)가 일상적 스트레스를 경험(2022년 대비 5%p 상승), 일반화된 불안장애 증상은 여학생 18% vs 남학생 10.3%로 나타남
- 70세 이상 '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'는 응답 남성 61%, 여성 65%로 OECD 평균(남성 89%, 여성 87%)을 크게 하회, 노년기 사회적 고립 심각
-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'고독사' 문제가 정책 현안으로 부상
 - 2023년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 50~60대 남성에서 발생

⑥ 성별 격차: 제도적 진전과 구조적 정체의 공존

-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 이하, 성별 고용 격차 및 임금 격차는 OECD 최대 수준
 - 여성 고용은 20대에 남성과 유사하거나 앞서다가 30대에 급락하는 'M자형' 곡선을 보이며, 이는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분석

- 여성 국회의원 비율 20%(2025, 2002년 6%에서 상승)로 OECD 평균(34%)에 크게 못 미침
 - '일자리가 부족할 때 남성이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'는 인식에 남성 59%, 여성 47%가 동의, OECD 평균(남성 18%, 여성 13%)의 3배 이상으로 매우 높음
- 15세 이상 여성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(IPV) 경험률은 9%(2018)로 OECD 평균(4%)의 2배 이상
 -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신종 젠더폭력도 증가 추세

3. 정책적 시사점

① 소득 중심 성장 패러다임의 구조적 한계 노출

- 한국은 GDP·가구소득 증가율에서 OECD 최상위권 성과를 거뒀음에도 노인빈곤·자살률·정부신뢰·성별격차 등 '삶의 질' 지표에서는 OECD 하위권에 머무름
 - 이는 지난 정부들의 정책 기조가 국민 체감 웰빙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했음을 방증
- 특히 소득·자산 지표(가구소득 증가율 2.6%, 재정취약계층 17%)와 관계적·심리적 웰빙 지표(자살률 OECD 1위, 정부신뢰 하락) 간의 괴리는 '경제는 성장했으나 삶은 불안한' 이중 구조를 보여주는 핵심 근거
 - 이는 향후 국민의힘의 정책 슬로건을 단순 '성장' 프레임에서 '성장의 온기가 삶에 닿는 나라'와 같은 체감형 프레임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시사

② 세대 간 정책 공백의 이중구조

- 노인빈곤(정년-연금 수급 공백)과 청년 이행기 위기(구직난·사회적 고립·부채)가 동시에 심화되고 있어 특정 세대에 국한된 지원이 아닌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이 요구됨
 - 노인층은 '일하고 싶어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' 공급측 문제, 청년층은 '일하고 싶어도 진입장벽에 막히는' 이중노동시장 문제로 원인이 상이하나 두 문제 모두 '노동시장 경직성'이라는 공통 뿌리를 가짐
 - 무엇보다도 노동개혁 없이는 세대별 대증요법의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
- 연금 수급개시연령(63세)과 법정 정년(60세) 간 '소득 공백'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스케줄과 맞물려 향후 더욱 심화될 구조적 리스크이므로 조기 대응이 필요

③ 정신건강 위기는 '개인 문제'가 아닌 '사회 시스템 문제'

- 아동·청소년 자살률의 이례적 급증(10~14세 4배 증가)과 전 연령대에 걸친 고립·외로움 확산은 입원 중심의 기존 정신보건체계로는 대응이 불가능함을 시사, 예방적·지역사회 기반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
 - OECD는 한국의 정신보건체계가 입원·위기대응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, 대다수 회원국이 채택한 '외래·지역사회 중심' 모델로의 전환을 권고
 - 이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및 전달체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하는 중장기 과제
- 또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치료 접근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어 단순 예산 확대를 넘어 인식개선 캠페인·언론보도 가이드라인 등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

④ 정부신뢰·정치효능감의 급락은 정치적 기회이자 경고

- 2021년 55%였던 정치효능감이 2023년 39%로 급락한 것은 현 정부의 소통·거버넌스 실패를 보여주는 객관적 국제지표로서 정치권의 '민생 신뢰 회복' 프레임 설정에 활용 가능한 근거임
 - 하락폭이 30~49세, 즉 경제활동 주력 세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이 계층을 겨냥한 '체감 민생' 메시지 전략의 효과성을 뒷받침
 - 동시에 자원봉사·시민참여 등 사회자본 지표도 동반 하락 추세인 만큼 정부 불신이 사회 전반의 참여 위축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치권 전체의 신뢰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균형 있게 인식할 필요

⑤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서의 성별 격차

- 여성의 M자형 고용 곡선과 OECD 최대 수준의 임금 격차는 단순 현금성 출산장려책이 아닌 노동시장 구조와 돌봄체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
 - '일자리가 부족하면 남성이 우선'이라는 인식에 대한 동의율이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라는 점은 제도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식·문화 차원의 병행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줌
 - 이는 기존의 '저출산 예산=현금성 지원' 프레임에 대한 재검토 근거로 활용 가능

⑥ 자연자본(에너지) 부문의 성과 부진

- 온실가스 배출량·탄소발자국이 OECD 최고 수준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한 현실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 가능
 - 재화용률(OECD 상위)이라는 강점과 재생에너지·온실가스(OECD 하위)라는 약점이 병존

한다는 점에서 '친환경 실적이 없다'는 단순 비판보다 '균형 잃은 에너지 정책'이라는 정교한 프레임이 설득력이 높음

4. 향후 추진 정책과제

① 노인빈곤 해소: '소득 공백' 구조 개혁

-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및 정년연장(60세→65세 단계적 상향) 로드맵 마련: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법제화 추진
 - 독일·일본 등 정년연장 선행국 사례를 벤치마킹한 '단계적 정년연장 + 임금피크제' 모델의 국내 적용방안을 당 차원에서 구체화
- 재취업 노인 대상 저임금·불안정 일자리 편중 해소를 위해 공공·민간 매칭형 양질의 시니어 일자리 발굴 및 최저임금 연동형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
-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재설계를 통한 76세 이상 초고령 빈곤층(빈곤율 54%)에 대한 두터운 지원 우선순위화

② 청년 자립 지원: 이행기 통합 지원체계 구축

- 고용노동부 중심의 구직 지원을 넘어 정신건강·주거·부채 문제를 통합 관리하는 '청년 원스톱 지원센터'(가칭) 확충
 -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정신건강·스트레스 관리 서비스 연계 기능을 청년 특화형으로 확대 하여 구직-정신건강 지원을 통합 설계
 - 사회적 고립·은둔 청년 조기발굴을 위한 학교·주민센터 연계 스크리닝 체계 법제화 및 개입 프로그램 국고보조사업 신설
- 청년 국회의원·정당 청년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
 - 아일랜드·슬로베니아의 국가 차원 청년참여전략 사례를 참고한 '청년정책조정위원회' 실질화

③ 전 생애주기 정신건강 시스템 개편

- 입원 중심 정신보건체계를 지역사회·예방 중심으로 전환
 - 외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·보장성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입법 추진
- 아동·청소년 자살 급증에 대응한 학교 기반 사회정서학습(SEL) 프로그램 의무화 및 조기개입 상담인력 확충
 - 정신건강 관련 낙인 해소를 위한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강화, 교사·학부모 대상 인식개선

교육, 포레상담(peer support) 프로그램 제도화

-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실태조사 상시화 및 지자체 사회적처방(social prescribing) 사업의 전국 확산
 - 서울시 모델의 성과 평가 후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
- 일본의 고독·고립 담당 장관직 신설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·중장년·노년 전 생애주기 고립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(가칭 '사회적 연결 특별위원회') 설치 제안

④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통한 저출산 대응

- 성별 임금격차 공시제 강화 및 기업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를 통한 임금격차 실태의 투명한 공개
- 캐나다의 '성별영향분석플러스(GBA+)' 제도를 참고하여 당 차원의 입법·예산안 성인지 검토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, 정책 설계 단계부터 성별격차 완화를 내재화
-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남성 육아휴직 실질 사용률 제고 방안(대체인력 지원, 사용 인센티브) 마련
 - 국제 사례(Equimundo 등 긍정적 남성성 프로그램)를 참고한 인식개선 캠페인 병행

⑤ 에너지 정책 재정립

-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한 현실을 근거로 원전 중심의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 정책을 재생에너지 확대와 병행 추진하는 균형있는 대안 제시
-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달성을 위한 원전 비중 상향 조정 및 차세대 원전(SMR 등) 투자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구체화